

60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김 창 수

인하대 초빙교수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

01

인천5·3민주항쟁의
배경

올해는 인천5·3민주항쟁 3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 약 5만 명이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인천 시민회관사거리 일대에서 군부독재 퇴진과 민주헌법 쟁취, 신군부 집권 연장책인 이원집정제 비판, 노동3권의 보장 등 민중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1만여 명의 진압경찰에 맞서 전개한 민주화운동이었다.

5·3항쟁은 약 10시간에 걸쳐 옛 시민회관사거리를 중심으로 주안역·석바위·제물포역·동인천·부천역 일대에서 전개되었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전국학생연맹(민민학련)·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자민투)·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EYC) 등이다.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서울대·연세대·서강대·송전대·고려대·장신대·인하대·인천대·중앙대·외대·이화여대·성심여대·안동대 등 24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천5·3항쟁 직전 국내 정치지형은 급변하고 있었다. 85년 2.12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을 내건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직선제 개헌이 86년 국면에서 최대의 정치현안이 되었다. 2·12총선 1주년을 맞은 86년 2월 12일 신민당과, 재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1천만 명 개헌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전두환 정권은 3당 대표회의 형태의 협의기구를 통한 제도 내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이른바 ‘이원집정제(二元執政制)’ 개헌을 통한 재집권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4월 28일에 서울대학교 전방입소반대시위에서 김세진, 이재호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 29일 신민당 이민우 총재, 민추협 김대중 의장, 민통련 문익환 목사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 회의를 열고 “소수 학생들의 반미, 용공, 과격 시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4월 30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3당대표회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의사를 밝히자 신한민주당은 가두서명과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회담에서 “좌익 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한 신민당 이민우 총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김세진, 이재호의 죽음으로 분노한 학생운동 세력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으며, 민국련에 참여하고 있는 재야단체인 민통련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이튿날 민통련은 이민우 총재의 좌익학생 배제 발언을 성토하는 한편 야권연락기구인 민국련에서의 탈퇴, 민통련 집행부의 총사퇴를 결정했다. 청와대 회담에서 신민당이 보인 타협적 태도와 신민당 이민우 총재와 민주협 의장단의 좌익배제 발언 등에 대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진영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¹⁾ 이 같은 개헌투쟁 전선의 균열은 5·3 당일 학생과 노동자 시위대가 보수대타협을 강하게 성토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민통련 주도의 연좌시위에도 호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양상 등으로 나타났다.

1) 보수대타협에 대한 비판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민족민주투쟁위원회,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전국학생연맹,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합, 서울노동운동연합, 5·3노동자투쟁위원회가 배포한 5·3 당시 유인물의 공통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다.

02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장

4월 30일에 있었던 청와대 3당대표회담을 전후하여 신민당과 민주협이 잇따른 과격세력 비난과 좌익배제 발언은 학생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재야세력의 반발을 초래했다. 재야세력은 신민당의 각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타협적인 이원집정제 개헌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5월 3일 인천 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신민당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에서 전역량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으며, 학생운동단체인 민민학련은 개헌 논의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제정 민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했다.

경기도경찰국은 5월 2일 저녁 9시부터 5월 3일 새벽 5시까지, 3,759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5.3대비 인천 일원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숙박업소 1,053개소를 포함한 1,271개소의 장소를 수색하고, 시위용품 81종 1,240점의 물품을 압수했다.²⁾ 또 경기도경은 자체병력 35개 중대 4,690명,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 지원인력 45개 중대 6,030명, 계 80개 중대 10,720명을 동원해 오전 9시에 시민회관 주변 주요 지점을 봉쇄하고 진압 작전을 대비했다.

신민당은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통련과 재야단체가 시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충돌의 전조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행사 당일 오전, 신민당원과 당직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회관 마당에 나와서 개헌 현판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행사 직전 시민회관 인근인 주안1동성당 일대 검문 강화, 주안역과 제물포역 승객에 대한 검문검색, 시민회관 광장에 모범운전자와 정복경찰 배치 등으로 신민당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었다. 신민당은 방송을 통해 경찰이 대화장 2km 밖으로 물러날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경찰은 시민들의 시위 참여를 막고 시위군중의 동선을 제한하기 위해 전투경찰 병력을 행사장 100~200m 앞까지 근접 배치하는 압박 전술을 변경하지 않았다.³⁾

2)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내무부, 5.19) p.41

3)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28)

재야단체의 시위는 12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인사연 회원을 비롯한 민통련 산하단체 회원 200여 명이 단체별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주안1동성당에서 시민회관사거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회관사거리에서 시위가 시작되고 주변에 운집해 있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위대는 곧 2천여 명 규모로 불어났으며, 민통련 주도의 집회가 시작될 무렵인 오후 1시경에는 4천여 명으로, 오후 2시경의 시위 군중은 5만여명으로 늘어났다.⁴⁾

오후 1시 20분경, 민정당사 앞 신기촌 방향의 경찰이 시위대와 공방을 벌이던 중 운집 중인 수천 명의 시위군중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최루탄 난사로 여러 명이 파편에 부상하자 이에 격분한 2,000여 명의 시위대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민정당사를 공격했다.⁵⁾ 이 과정에서 민정당 제1지구당에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이 시위대에 포위되어 고립되는 일이 발생했다.⁶⁾

오후 3시 45분경, 신기촌 방향의 경찰이 최루탄 가스차를 앞세우고 시민회관사거리 부근까지 진입하다가 시위대에 의해 전경과 진압차량이 포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후 4시 30분경에는 경찰의 최루탄 운반 트럭이 시위대 한가운데로 진입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최루탄 운반차는 신기촌 쪽에서 출발하여 본래 경인상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최루탄을 보급할 예정이었다. 석암사거리에서 진압부대의 후방으로 접근해야 할 차량이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는 주안역 대로에 들어왔다가 시위대에 포위된 것이다.

오후 5시 20분경,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이 '경찰 방해로' 개헌 현판식을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김영삼 고문 등 신민당 의원들은 모두 현장에서 철수했다. 현판식 연기 발표 직후 민통련 산하 단체 소속 200명의 시위대는 철야시위를 결의하고, 2,000명의 학생과 노동자들도 시가행진을 하며 대열을 정비했다. 신민당 개헌현판식이 무기 연기된 이후 시위대와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최루탄 발사와 투석전을 계속했다.

오후 6시 20분경 경기도경은 시민회관사거리의 네 방향에서 진압부대를 일시에 투입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해산된 시위대는 주안역, 제물포역, 수봉공원입구, 부천역, 동인천역으로 옮겨 시위를 계속하였고,⁷⁾ 마침내 오후 10시경 10시간에 걸친 5·3항쟁의 현장상황은 종료되었다.⁸⁾

4)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보도 참조

5) 경찰의 과잉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하고 격렬한 투석과 화염병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증언이 많다.

6) 『선봉』4호('86.5.13)

7) 서울로 귀가중인 문미숙, 송민정 외 20명은 부천역전 시위를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8) 대검,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보고」(1986.5.19.), 경기도경 「실황조사서」(5.28) 등 참조

03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

5·3항쟁은 기본적으로 직선제 개헌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전두환 정권과 공안당국은 인천5·3항쟁 당시 중요한 요구보다 특정 구호만을 부각하여 시위의 과격성을 확대 재생산했다. 집회 참가자 사이에 부문별 특성과 정치 노선상의 차이도 존재했지만, 참가자들은 직선제 개헌을 일관되게 요구하면서 이원집정제를 반대했다.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미일외세 축출 요구도 높았으며 노동운동 단체와 학생들은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중권력 수립도 제기했다.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민주주의와 반독재투쟁으로 국한하여 이해할 경우 운동의 입체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안 체제인 민주정부 수립과 새로운 헌정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나아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국제적으로도 자주적인 외교를 요구하는 노력도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5·3민주항쟁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변혁의 다양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였다.

5·3항쟁은 변혁운동 세력의 본격적 출현을 대중적으로 표출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내재되어 있던 급진적 요구와 주장을 제기한 분기점이기도 했다. 5·3항쟁이 한국사회의 변혁을 둘러싼 이론과 실천의 분열상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선명한 분리 정립은 87년 6월항쟁 당시 다양한 민주화운동 세력이 ‘호헌철폐 독재 타도’와 같은 공통의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대중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최원식은 다양성은 변화와 생성의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5·3은 “난장적 투쟁성으로 민주화운동을 열었고 87년 6월항쟁으로 가는 결정적 길목이 되었다”는 평가를 제시한 바 있다.⁹⁾ 김영곤도 5·3항쟁을 반독재민주주의, 노동자의 권리, 삼민주의, 민중연대, 반전평화, 반핵 등 여러 사상과 이념이 모인 저수지이며, 이들이 다시 5·3 이후 여러 가지 사건으로 파생한 수원지로 파악하였다.¹⁰⁾

5·3항쟁과 6월항쟁은 요구와 집회 형태에서도 놀랄 만큼 유사하다. 둘 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으며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전국 각계각층이 모여 집회와 시위를 통해

9) 「인천5·3민주항쟁의 난장적 축제로 민주화운동 열어」 『다시부르마 민주주의여』(2016)

10) 「인천5·3항쟁과 민주·진보운동의 미래」(2014)

군사정권과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경찰의 공격에 맞서 장시간 집회를 유지했으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도 같았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이우재 인사연 집행국장은 5·3항쟁이 6월 항쟁뿐 아니라 이후 20년 동안 진행된 민주화운동의 맹아였다고 평가했고, 노회찬(당시 인노련 회원)은 5·3항쟁은 6월 항쟁의 맹아였지만 ‘커다란’ 맹아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인천5·3민주항쟁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한 6월항쟁의 정신과, 노동3권을 비롯한 민중생존권 요구라는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 투쟁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또한 5·3민주항쟁은 6월항쟁을 촉발한 실질적 도화선이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이 5·3항쟁 이후 대대적 검거선봉을 일으키고 경찰서별로 5·3항쟁 관련 배후인물 수사를 경쟁적으로 벌이는 과정에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 발생했다. 뒤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5·3항쟁은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 본격화한 분기점이었다. 신민당의 인천 현판식에는 노동자들과 노동운동 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층 민중 생존권 문제를 정치적 요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5·3항쟁에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노동운동의 메카’로 불리던 인천의 특성과 노동운동이 활성화하는 시점과 관련된다. 1984년부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노동현장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인천노복), 인천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3권투위) 등이 결성되어 지역 내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86년 2월에는 80년대 초에 진행된 노투, 노복, 3권투위를 비롯한 인천지역 노동자 투쟁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이 결성되었다. 인천지역 최초의 노동자 정치조직이었던 인노련은 86년 말 해산될 때까지 지역 내 연대투쟁뿐 아니라 서울노동운동연합과 연계하여 전국적 연대도 모색하였다. 노동자들의 참여로 5·3항쟁은 노동3권보장, 8시간 노동제, 파업자유 쟁취, 노동해방 등 실질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확장되었으며 당시의 요구는 6월항쟁 이후에 전개된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분출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노동운동의 과제로 계승되고 있다.

〈표 1〉 80년대 주요 민주화운동

민주화 운동	성격	운동 규모	피해 현황	비고
5.18광주민주화운동 (1980.5.18~5.27)	신군부집권음모 규탄	20일 연속	사망 218명 부상 3,139명 후유증 사망 376명 구속 고문피해 1,589명 행방불명 65명	민중자치실현, 신군부 정권찬탈 계획 폭로
인천5.3민주항쟁 (1986.5.3.)	군부독재퇴진 직선제개헌 민중생존권요구	5만명	연행 319명, 129명 구속 60명 수배 (권인숙 성고문, 박종철 고문 치사)	6월항쟁 도화선
6월민중항쟁 (1987.6.15~6.26)	군부독재종식 직선제개헌	5백만명	‘6.26평화대행진’ 3,467명 연행	군부퇴진, 직선제 쟁취 (6.29선언)

04

민주화운동의
새 단계

5·3항쟁은 변혁운동의 본격적 출현, 민주화운동에 내재되어 있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분화하고 심화하는 분기점이기도 했다. 민통련과 노동운동단체, 학생운동 등 정치 노선별로 강조점은 서로 달랐지만 반독재·직선제 개헌을 공동의 요구로 삼았다. 이러한 경험은 87년 6월항쟁 당시 다양한 민주화운동 세력이 경향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호헌철폐 독재 타도’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합의하고 공동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성은 변화와 생성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5·3항쟁의 ‘난장적 투쟁성’은 분열상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운동이 지녀야 할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다양성과 역동성이 여과 없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촛불집회이다.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시켜준 일대 사건이었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이듬해 3월 25일까지 총 21차 대회로 5개월간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하고, 100만 이상 집회가 5차례에 달하는 촛불집회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시위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명예혁명이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탈위계성, 다중정체성, 자발성, 창조성, 유쾌함,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를 보여주었다. 촛불집회 당시 무대 발언에 나선 시민의 수만 1,000여 명에 달한 데서 보듯 시위참여자들은 개인이면서 다양한 자기표현으로 공론을 만들어 간 새로운 주체들이었다.

5·3항쟁의 요구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민중생존권과 같은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민주화운동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과 제도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생존권 투쟁으로,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인권운동으로, 정부의 부패감시, 경제정의실현을 통한 복지 향상 등 일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본격화한 성범죄와 성폭력에 반대하는 ‘미투운동’, 학교·가정·군대 내 폭력, 직장 갑질·재벌총수 일가의 갑질과 같은 일상적이고 내재적인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심화하고 있다.

5·3항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5·3항쟁 당시에 요구한 실질적 민주화, 즉 민중생존권 문제는 양상만 바뀌었을 뿐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플랫폼노동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진화도 요구받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협치와 분권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하며, 인권과 평등, 생태주의를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주의, ‘새로운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창안하는 일이 사회적 과제이다.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1년 5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